

국제리뷰

- [미국]
2018년 미국 중간선거 : 또 다른 여성의 해가 될 것인가?
신기영 |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교수
- [덴마크, 네덜란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의 돌봄정책 탐관기
김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스트리아]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
이택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년 미국 중간선거 : 또 다른 여성의 해가 될 것인가?

신기영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교수

#MeToo 국면에서의 중간선거: 여성후보수가 과거 최고기록 달성

2018년 10월 초 현재, 미국은 중간선거를¹⁾ 앞두고 여성들이 대거 정치에 진입할 것으로 예비선거후보로 등록한 여성후보의 수가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초부터 이번 선거가 여성의 정치진출이 크게 늘어났던 1992년 선거(여성의 해로 불렸다)와 비교되면서 2018년이 또 다른 여성의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예비선거가 한참 진행되던 여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대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 후보자가 확정된²⁾ 현재 기록을 보면, 2018년이 미국 여성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은 거의 확정적인 사실로 보인다. 올해 중간선거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예비선거 후보등록자도 기록적인 숫자를 보였고, 여성들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정치 신인들이 많았다(Zernike and Lu 2018). 은퇴하는 의원들이 많아 빈 의석이 많았던 1992년에 비해 올해는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도전했다. 그럼에도 예비선거에서 여성후보자들이 보인 선전은 2018년을 또 다른 여성의 해로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는 단지 수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의 도약이라는 점 이외에도 젠더정치의 측면에서 중요한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1) 미국은 의회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이 중에서 대통령 임기가 4년이므로 대통령선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해에 치루어지는 선거를 중간선거로 부르고 이때 상원 3분의 1, 하원의원 전원이 선출된다. 올해는 2016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2년만의 선거로 중간선거에 해당한다. 연방, 주의회뿐 아니라 주지사, 주검찰청장 등 모든 선출직이 대상이다.

2) 현직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 스미스가 속한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제도상 예비선거가 11월 6일에 실시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1〉 미국 의회 예비선거 및 본선 진출 여성후보수

| | 과거 최고 (년도) | | 2018년 | |
|-----------|------------|------------|-------|------|
| | 예비선거 | 본선진출 | 예비선거 | 본선진출 |
| 총여성후보수 | | | | |
| 상원 | 40 (2016) | 18 (2012) | 53 | 22 |
| 하원 | 298 (2012) | 167 (2016) | 476 | 235 |
| 민주당 여성후보수 | | | | |
| 상원 | 28 (2016) | 12 (2012) | 31 | 15 |
| 하원 | 190 (2012) | 120 (2016) | 356 | 183 |
| 공화당 여성후보수 | | | | |
| 상원 | 17 (2010) | 6 (2012) | 22 | 7 |
| 하원 | 128 (2010) | 53 (2004) | 120 | 52 |

자료: <http://cawp.rutgers.edu/congressional-candidates-summary-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미국의 럿거스 대학 「미국여성정치 연구소」(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의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종결된 예비선거의 결과를 〈표 1〉을 통해서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듯 2018년의 여성후보수는 앞서 지적한 대로 상하원의 예비선거 후보수와 본선에 출마가 확정된 여성후보수 모두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크게 갱신했다. 하원 여성출마자는 과거 최대기록이었던 2012년의 298명에서 올해는 476명으로 160% 증가하였고,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5명이 예비선거를 통과하여 본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상원의원선거의 경우도 22명의 여성후보자가 본선거 출마에 성공하면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0월 현재 여성 상원의원이 23명(민주당 17, 공화당 6)으로 23.0%, 여성 하원의원은 87명(민주당 64, 공화당 23)으로 20.0%에 지나지 않는다.³⁾⁴⁾ 이에 반해 이번 선거의 본선에서 출마하게 된 여성후보자의 비율은 상, 하원 전체 후보자의 각각 32.4%와 28.7%를 차지한다. 예비선거 후보자의 여성후보 비율이 각각 20.8%, 24.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후보자들의 예비선거 통과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당별로 구분하여 보면, 특히 민주당의 경우 상, 하원 모두 본선 출마자의 42.9%가 여성후보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⁵⁾ 민주당 여성 후보자의 예비선거 승리비율은 현직의원과의 신인출마자 모두 민주당 남성후보자 및 공화당 남녀 후보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여성의원 선전이 미국 의회의 여성비율 증가율을 결정하는 열쇠

3) 자료: CFWP 홈페이지(www.cawp.rutgers.edu)

4) 미국은 하원의원수 기준으로 IPU순위중 아직 103위에 머물러 있다(2018년 9월1일 기준). www.ipu.org

5) 민주당 여성의원 후보는 2016년의 선거에 비해 146%, 공화당의 경우 35%가 증가했다. 공화당 여성후보자의 경우는 2004년 53명이 역대최고치였다. 2018년은 52명이 예비선거를 통과하여 본선출마가 확정되었다.

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여성의원 비율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다만, CAWP의 2018년 9월 13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하원의원 선거구 중에서 여성후보자들이 유리한 선거구가 90여 곳(민주당 73, 공화당 17), 접전으로 드러난 선거구가 16곳(민주당 12, 공화당 4)이다. 그 외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128개 선거구에서는 여성후보자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중에서 여성후보자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선거구 90석과 접전인 16석중 12석(여성 대 여성 대결구도가 4선거구이므로)을 모두 여성후보자가 승리하게 되면 2019년 미 하원은 여성의원인 106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여성의원인 비율이 24%로 역대 최대치가 된다.⁶⁾ 24%는 올해 급증한 여성후보자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비율이 단번에 5%포인트 가까이 급증하여 하원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비율이 20%를 크게 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2018년 이전에 여성이 한 선거에서 5%포인트 이상의 증가폭을 보인 것은 1992년뿐으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도약의 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은 1992년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MeToo 국면은 중간선거의 중요한 동력: 여성행진에서 캐버너 청문회까지

2018년 중간선거가 1992년 선거와 유사한 또 다른 점은 남성중심 정치에 대한 여성들의 위기의식과 분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선거라는 점이다. 2018년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들이 역대최고를 기록한 배경에는 후보시절부터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혐오적인 발언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여성과 소수자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2017년 후반기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폭발적으로 이어진 #미투 운동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연대감을 통해 크게 세력화(Empowerment)되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획된 여성행진(Women's march)은 이러한 집단행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행진은 2018년에도 계속되었다. #미투 운동과 여성행진이 여성혐오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직접행동주의”적인 저항이라면(김현미 2018), 2018년 중간선거에 도전한 여성들은 기존의 법제도와 가부장적 문화 개혁을 외부에서 요구하는 직접행동주의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그 구조의 내부자의 위치에서 현실권력의 핵심인 법제도와 남성정치를 재구성하는 역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6) 주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성주지사 후보수는 과거 10명(이 중 당선자수는 9명)이 최고기록이었다. 그에 반해 2018년에는 16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과거 최고 기록을 크게 넘어섰을 뿐 아니라 그 중 8명은 현직이 은퇴한 주지사직에 도전한다.

1992년도 그러한 동력이 배경이 된 선거였다. 1992년 선거는 상원 청문회에서 여성변호사인 아니타 힐이 미 대법관 후보인 클라렌스 토마스의 성희롱에 대해 증언한 것이 전미의 주목을 끌었던 다음 해였다. 당시 전원 남성들로 구성된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는 남성 입장만을 대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젊은 흑인여성의 성희롱 증언은 신뢰성 부족이라는 결론으로 결국 묵살되었다(토마스는 상원에서 52대 48로 대법관으로 승인되어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중이다). 당시 전미로 생방송되었던 이 법사위 청문회의 질의 응답과 힐 변호사의 증언은 여성들에게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웠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증언이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하였고,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정치현실에 위기감을 느껴 다음 해에 대거 선거에 도전하였다(Hinds 1992). 많은 여성단체와 풀뿌리 단체들도 조직되어 여성후보를 찾고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여성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자금모집도 몇 배로 늘었다(Delli Carpini and Williams 1993: 35). 이 선거에서 여성 222명이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하였고 이중 106명이 본선에 출마하여(1990년에는 69명만이 본선거에 출마했었다), 47명이 당선되었다. 여성의원이 24%나 증가하여 1991년까지만 해도 겨우 5~6%에 머물러 있던 하원 여성의원의 비율이 1992년에는 미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게 되었다. 상원에서도 여성의원이 2명에서 6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최초의 흑인여성 상원의원이 일리노이주에서 탄생하였다(CAWP fact data).

1992년이 “여성의 해”라고 명명된 것은 여성의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힐의 성희롱 증언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성희롱관련법의 개정이었다. 하원은 곧장 성희롱 피해자의 소송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때까지 소극적이었던 부시대통령도 곧장 관련법에 사인하였다(Hesse 2016).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이듬해에는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인 10,578건의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었고 직장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등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고조되었다(Hesse 2016).

마치 역사의 실험처럼 2018년에도 공화당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성폭력 의혹이 고발되고 피해자가 상원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일이 재연되었다. 2018년에는 이미 모든 출마자가 결정되고 중간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 둔 상황에서 상원법사위 청문회가 개최되어 예비선거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2018년에도 결국 여성의 인권보다 정당 간 경쟁구도를 앞세운 후보자의 인준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약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성행진과 #MeToo 운동, 케버너 연방대법관 인준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 상황은 성폭력과 성차별의 온존이 가부장적 남성권력, 그 중에서도 이 남성권력의 정점을 이루는 정치영역과 맞닿아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2018년 중간선거에 도전하게 하는 자극이 되었다면, 케버너의 연방대법관 인준은 여성유권자들의 젠더의식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Nilsen 2018).

역대최대의 성차(Gender gap)? 여성유권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한다

남성중심적인 정치개혁은 여성후보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는 남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투표의 “성차(The Gender Gap)”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의 성차는 같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남녀 투표자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구미에서는 대략 70년대 후반부터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유권자의 투표율보다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 시기부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진보적인 투표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근대적 성차(Modern gender gap)로 부른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여성유권자가 남성유권자보다 절대적인 수도 많으며 투표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남성투표자중 52%가 트럼프후보에게 투표하였고, 여성투표자는 41%만이 트럼프후보에게 투표하였다(Huang et. al. 2016).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주당에 투표하며 그러한 남녀간의 투표율 차이는 4~10% 정도로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4년의 중간선거에서도 각 지역구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남녀유권자의 비율을 평균하면 남성이 10%포인트정도 더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남성 58%, 여성 48%).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의 성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중간선거는 미투 국면에서 치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여성들의 투표율이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과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실제로 8월 말에 실시한 PRRI의 여론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 유권자의 56%가 지역구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으며 겨우 35%만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50%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였고, 4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Jones et. al, 2018: 23). 같은 여론 조사에서 여성유권자들은 남성유권자들보다 성폭력 전력의 의심되는 후보자에게 훨씬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단지 유권자의 양적인 의미로서의 “성차”를 넘어 선거의 내용에 있어서도 젠더이슈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성후보자들은 여성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기를 꺼려하고 유권자들도 여성후보

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거나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곤 하였다. 그러나, 미투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9월 말 시점에서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Lauter 2018).

결론

미국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역할이 강하다. 2018년의 중간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양당구조를 넘어서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는 젠더이슈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등장했다.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후보로 출마하고 예비선거를 통과하였다. 이들 여성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엘리트 백인여성 후보자만이 아니라 최초의 트랜스젠더 시장후보, 무슬림 여성의원 후보, 남성의원 일변도의 주에서 최초로 탄생한 여성하원 후보 등 “역대 최초”의 이름을 단 다양한 여성후보자들이 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유권자들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라고 하였다. 이번 중간선거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들이 주역이 되는 새로운 젠더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을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미국은 90년대부터 여성의원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원의 비율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정치의 남성 권력을 교체하는 일은 9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미완으로 남겨진 과제였다. 2018년 여성들이 이 과제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다.⁷⁾

• 참고문헌 •

김현미, 2018 “미투 운동, 왜, 지금 그리고 이후”, 젠더리뷰, 여름호.

Carlsen, Audrey and Denise Lu, “More Women Than Men: State Legislatures Could Shift for the First Time.” *The New York Times*(June 30, 2018)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6/30/us/politics/women-state-legislators.html> (2018.08.03.)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 Rutgers University, Election Watch

<http://cawp.rutgers.edu/potential-candidate-summary-2018> (2018.10.05.)

7) 연방수준뿐 아니라 다른 선거직에서 여성후보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갱 신 상태이다. 주의회에도 여성후보가 약진하여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과반수를 넘는 주의회가 복수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arlsen and Lu 2018).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Bruce A. Williams. (1993). "The Year of the Woman? Candidates, Votes and the 1992 Elec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8: 29-36. Retrieved from http://repository.upenn.edu/asc_papers/22 (2018.08.03)
- Hesse, Monica, "Anita Hill's testimony compelled America to Look closely at sexual harassment." *The Washington Post* (April 13,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anita-hills-testimony-compelled-america-to-look-closely-at-sexual-harassment/2016/04/13/36999612-ea2e-11e5-bc08-3e03a5b41910_story.html?utm_term=.7152f78a9659 (2018.08.03.)
- Hinds, Michael Decourcy, "The 1992 Campaign Woman in the News: Lynn Hardy Yeakel: Skillful Political Novice." *The New York Times* (April 29, 1992)
<https://www.nytimes.com/1992/04/29/us/the-1992-campaign-woman-in-the-news-lynn-hardy-yeakel-skillful-political-novice.html> (2018.08.03)
- Huang, Jon, Samula Jacoby, Michael Strickland, and K.K. Rebecca Lai. "Election 2016: Exit Poll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8, 2016).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6/11/08/us/politics/election-exit-polls.html> (2018.10.10.)
- Jones, Robert P. et al., 2018. Partisanship Trumps Gender: *Sexual Harassment, Women Candidates, Access to Contraception, and Key Issues in 2018 Midterms*. PRRI.
<https://www.prri.org/wp-content/uploads/2018/10/Partisanship-Trumps-Gender-B.pdf> (2018.09.26.).
- Lauter, David. "With growing support from women, Democrats poised for major gains in midterm, new poll shows." *Los Angeles Times* (Sep. 26, 2018)
<http://www.latimes.com/politics/la-na-pol-usc-latimes-poll-20180926-story.html> (2018.10.06)
- Nisen, Ella. "Will the Kavanaugh hearings drive women to the polls in 2018? 8 experts weigh in." *VOX* (October 2, 2018).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10/2/17914126/kavanaugh-hearings-women-2018-midterms-experts-ford> (2018.10.5.)
- Zernike, Kate and Denise Lu, "A Surge of Women Candidates, but Crowded Primaries and Tough Races Await: These are the 476 Female House Candidates This Year." *The New York Times* (May 12, 2018)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5/12/us/politics/women-midterm-elections.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politics&action=click&contentCollection=politi> (2018.08.03.)

0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의 돌봄정책 탐관기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의 일반과제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는 파편화된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정책을 연속적인 돌봄정책의 틀 내에서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2차년도에 걸친 연구이다. 첫 년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아동 및 노인 돌봄정책의 제도사를 훑으며, 돌봄의 공식화와 보편주의의 진전이라는 성과 뒤에 민간 위주의 전달체계로 인한 한계를 확인하였다. 2차년도에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잘 실현하고 있는 두 국가,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직접 관찰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연히도 이들 두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가들이다. 덴마크는 자타공인 행복도 세계 1위의 국가이며, 네덜란드는 행복한 국가 10위권 내에 꾸준히 들면서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히기도 한다. 연구진들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일주일 간 머무르면서 돌봄정책 분야 연구자 다섯 명과 7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시민을 돌보는 국가, 덴마크

사민주의 복지국가 중에서도 덴마크는 가장 높은 공공부문 비율을 자랑하는 국가로, 연구진은 덴마크의 돌봄노동이 공공부문 내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덴마크에서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정부 노동자들이다. 덴마크에서 만난 학자들은 덴마크의 공공부문에 대한 설명을 여러 관점에서 해주었다. 코펜하겐 대학의 피터 아브라함슨(Peter Abrahamson) 교수는 공무원을 ‘civil servant’와 ‘public employee’로 구분하고, 전자는 경찰, 군인 등으로 노조활동이 금지된

전통적 의미의 공무원인 반면, 돌봄노동자들은 후자에 속하는 집단으로 쟁의활동이 가능하고 노조조직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과 유사한 기관인 덴마크 사회과학원의 티네 로스트고(Tine Rostgaard) 교수는 복구의 공공서비스 모델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돌봄에 대한 공공의 높은 책임성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덴마크의 돌봄정책은 공공부문의 합리화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조직과 재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돌봄의 직접제공에 대한 부분만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돌봄에서 영리사업자도 등장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구조는 이들이 이윤을 남기기 쉽지 않은 구조로, 가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교수님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덴마크의 돌봄노동자들은 지방정부에 직접 고용된 정부 근로자, 혹은 공무원이었고, 이들은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영위하였다. 한국사회의 경우 돌봄영역별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은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은 매우 넓게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지 않은 공공부문의 기관 중에서도 직영을 하는 형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었다.

덴마크에서 통역을 진행한 통역사는 현장 보육교사의 경험이 있는 현지 교민이었는데, 아동돌봄이나 노인돌봄을 위해 ‘social pedagogy’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social pedagogy’는 ‘사회교육’이라는 의미로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돌봄 전반을 아우른다. 덴마크식 ‘돌봄’은 돌봄필요자의 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필요자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교육하며 보살피는 것으로 정의되는 듯 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과 ‘돌봄’이 뚜렷이 구분되는 나라에서의 돌봄관과는 참으로 상이했다.

현지에서는 민간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과 숲 유치원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덴마크의 경우 매우 일찍 섭외하지 않으면 섭외 자체가 불가능하여 한달 전에 섭외했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았다. 노인복지주택의 노인들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경우부터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까지 다양했는데, 외부자인 방문객들에게도 스텝없이 사생활을 보여주는 친절함이 인상적이었다. 노인복지주택은 화려하거나 새 건물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되어 깨끗하였고, 노인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었다. 숲 유치원은 깨끗한 공기에서 여기저기에 텅굴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눈이 부셨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그룹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은 놀이터 나무 속에서 텅굴거나 우리 방문객에게 덴마크어로 말을 걸기도 했으나 교사들은 아이들을 별달리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두 기관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코펜하겐 내에서 꽤 평판이 좋은 시설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시설은 화려하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며,

규격화된 고급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해 덴마크의 이들 두 시설은 비교적 검소한 편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안정감과 따뜻함이 녹아있었고, 자연 그대로를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관계를 만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통한 돌봄시간의 극대화,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비행기를 잠깐 타면 바로 네덜란드에 도착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사회보장이 탄탄한 시간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다. 돌봄정책, 특히 노인돌봄정책에서는 재가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서비스형태이고, 재가서비스는 호출형 근로에 주로 기반한 서비스로서 시간제 고용과 친화력이 높다. 연구진들은 돌봄서비스, 특히 재가서비스가 시간제 고용형태에 기반하면서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유트렉 대학교(Utrecht University)의 야네크 플란텐가(Janneke Plantenga) 교수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축약판으로 보이는 네덜란드 정책자문위원회(WRR)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니크 크레머(Monique Kremer) 교수의 설명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네덜란드의 노동정책을 모르면 돌봄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덜란드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이 보편화되어 있고, 전일제로 일하는 전문직들도 주4일 정도만 근무한다.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반일제로 일하고, 영유아가 지나면 아버지는 전일제, 어머니는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어 네덜란드에서는 육아휴직정책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돌봄서비스 또한 일관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보육법(Child Care Act)이 제정되어 보육정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가가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사실상 없고,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형태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주2회 만나질 정도를 보내는 유아원이 있으며, 만 4세부터는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이 시작된다. 노인돌봄 서비스 또한 일관된 정책구조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현금급여(personal budget), 민간보험을 통한 목욕서비스 등이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교수는 네덜란드의 보육정책에서 국가의 비용지원으로 인한 민간 중심의 급속한 서비스 기관 확대가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종종 등장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큰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 제공역할을 하는데에 소극적이고 재정을 통해 비용지원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급속도로 서비스의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높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돌봄필요자가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잦은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은 네덜란드와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아서 한국과 같은 첨예한 일가족양립 갈등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점은 큰 차이점이었다. 어쩌면 그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한국처럼 공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통역과 섭외를 진행해 준 통역사는 유트렉(Utrecht)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이었고, 덕분에 이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살살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먼저 방문했던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처럼 철창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고 아무나 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기도 한다고 했다. 마을의 특징인지 네덜란드 특유의 편안함과 신뢰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안전사고는 난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방문한 초등학교는 아침 8시반부터 오후 3시 넘어서까지 기본과정이 운영되고 주1~2회만 12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방과후 교실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며 수업은 다른 조직에서 운영하였다. 두 명의 선생님이 한 반을 번갈아가며 맡고 주2~3회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업무가 많은 교장선생님도 주4회를 일하고 주1회는 다른 선생님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주5일을 일하는 어느 선생님은 3일은 담임업무, 나머지 2일은 담임이 아닌 학교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 일자리에 한 명이 독박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일자리가 두 명 이상의 합동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신선하였다. 이런 구조가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된 국가의 근로방식이었다.

초등학교 외에도 유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영유아보건소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간 유트렉 마을은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공간 속에서 촘촘하게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학교, 유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영유아보건소, 노인주택 등이 인근에 밀집되어 있었다. 이 기관들의 특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또한 전반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근로방식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었다. 유아원의 경우 아이들이 주2회 반나절을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시간 자체가 시간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사들도 시간제로 근로하였다. 유아원의 원장 개념은 분명하지 않았고, 유아원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정부 소속이었으며, 관리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담당자는 심지어 자원봉사자였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었는데,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고용이 설계되어 있었다. 인건비는 재단에서 지급받지만 임금테이블은 중앙정부와 노조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영유아 보건소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

는데, 통역해주신 교민의 설명으로는 가정방문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알차고 진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은 아이가 셋인 여성이었는데, 주4일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주3일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야근 없이 주5일 일할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 한국인 연구진들에게는 ‘주4일 과로설’은 꿈같은 얘기로 들렸다.

마지막 일정은 네덜란드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이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첨단화된 서비스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은 곳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가정을 동행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간호사였는데, 20-4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방문하여 지역 내의 많은 가정을 계속해서 방문하였으며, 특정한 client에게 동일한 간호사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방문하는 간호사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지정된 가정과 매칭이 되고 시간을 단위로 하여 그 시간동안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비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요양보호팀이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식의 넓은 매칭이 이루어지고 수행하는 업무도 매우 촘촘하게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들 간호사들 또한 시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역시 주4회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일을 줄였다고 설명하여 다시 한 번 연구진에게 긴 한숨을 안겼다.

짧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아껴 쓰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이들 두 국가들의 돌봄정책을 참관한 소중한 경험은 상당히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다. 시간제가 주요 일하는 방식으로 이미 자리잡은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짧은 전일제 근로 중심으로 고용이 구성된 덴마크에서도, 근로시간이 짧은 대신 사람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다시 말해 매우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었다. 면담한 사람들 중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동료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끝나고 회식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는 듯 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에서 검소함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금이 매우 높은 수준인 덴마크의 경우에는 정말로 오래된 자동차가 길에 즐비했고, 네덜란드의 노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일도 흔하지 않다고 했다. 돌봄시설들 또한 부유층이 이용하는 곳일지라도 검소하고 깨끗하며 자연친화적일 뿐, 한국의 고급시설과 같은 화려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내고 돌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도시 곳곳에서 자전거의 앞뒤에 아이들을 싣고 오르막도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아빠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 이들 두 국가의 시민들은 많은 시간을 당연스럽게

자원봉사에 사용하고 있었고, 돌봄시설 근무자들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돌봄에는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내어놓고 있었다. 호화스러운 소비재 대신,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함께 쓰기 위해 사회에 많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들을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 비결은 아니었을까.

0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다

: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OECD 공공 거버넌스국(Directorate of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주최 고위예산당국(SBO)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의 제2차 회의 및 성평등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OECD 제2차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 원 성인지예산센터는 OECD으로부터 한국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발표를 요청받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재정관리국 담당자와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성인지예산 관련 발표와 토론은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원 성인지예산센터는 발표 및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 및 UN Women,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성인지예산 관련 지원과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의 성인지예산 운영사례를 홍보하고 돌아왔다.

이들간의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성인지예산 전문가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싶었던 인상적인 논의는 다름 아니라 주최국 오스트리아의 사례이다. 이번 2차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는 특별히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는 이번 회의의 주최국이 오스트리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중앙정부의 통상적 재정관리제도(특히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와 잘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나아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운영하고 있는 전체 나라들 중에서, 오스트리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한 국가 재정관리제도(PFM) 안에 필수적 부분으로 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통합시킨 모범적 사례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사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세 건의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OECD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오스트리아의 재정개혁 과정과 그로 인해 도입된 성과예산제도 및 그 필수 요소로서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하고(발표자 Ronnie Downs, OECD 공공 거버넌스국 공공지출·예산부 부서장), 뒤이어 오스트리아 연방 재정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에서 내부자의 관점에서 재정관리제도 안에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절차적 필수요소로 통합되었는지를 설명하였고(발표자 Friederike Schwarzenborfer, 오스트리아 연방 재정부 예산·재정국 부국장),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조직(연방성과관리국, Federal Performance Management Office)이 속해있는 연방 행정서비스·스포츠부(Federal Ministry for the Civil Service and Sports)에서 실제 성과중심의 재정관리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발표하였다(발표자 Ursula Rosenbichler, 오스트리아 연방 행정서비스·스포츠부, 전략적 공공행정 관리·공공부문 혁신국, 부서장).

OECD측 발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선진적인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에 근거하여 예산사업의 우선성을 판단하는 연계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약점 또한 노정하고 있으며, 성과예산체계의 필수 요소로서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역시 성과예산제도가 갖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성인지예산이 성과예산체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서 해당 부처가 추진할 성평등 목표와 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성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는 이러한 오스트리아식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의 규모와 수준을 추적할 수 있는 전산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자료의 공개, 성평등 주무부처가 범정부적 성평등 추진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필요, 부처별 성평등 성과목표 설정시 성평등영향평거나 규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채널 확립 등을 주문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재정부의 주제발표에서는 오스트리아 예산관련 규칙과 규정들에서 어떻게 젠더 관점이 제도화되어 있는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성과(결과)중심의 재정사업관리 거버넌스, 성과주의 예산, 발생주의 회계, 총액예산제 등이 오스트리아 재정개혁의 핵심 4대 과제였으며, 그 중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사업관리 거버넌스와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구축에 성평등 관점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의 핵심 요소였음을 피력하였다. 오스트리아 각 중앙부처의 성과예산구조는, 최상위 수준에서 부처의 핵심 미션(우리나라 예산구조상 ‘분야’ 수준)이 설정되고 각 분야별로 최대 5개까지의 전략목표가 설정되며(‘부문’ 수준), 각 전략목표별로 역시 최대 5개까지 성과목표가 설정되고(‘프로그램’ 수준), 각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저마다의 산출

(결과)목표를 갖는 다수의 단위사업들이 편성된다. 분야수준의 미션은 중기재정운용계획(MTEF)에서, 부문 수준의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목표는 당해연도 예산서(annual budget statements)에서, 그 하위의 단위사업 수준의 산출(결과)목표들은 당해연도 예산서 부속서류인 상세예산 설명서에서 각각 제시된다. 이 때 최대 5개까지의 전략목표 중 하나는 반드시 성평등 관련 목표로, 그 하위의 프로그램 성과목표들 중 하나도 반드시 성평등 관련 목표로 수립하고, 그 하위의 단위사업들은 이렇게 설정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제들로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들(헌법, 연방예산법 등)에 명시함으로써, 오스트리아는 성과중심의 예산체계에 성평등 고려를 명실상부하게 통합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틀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평등 관점의 재정운용을 재정운용의 근본



〈2018년 6월 OECD 고위예산당국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 둘째 날: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오렘홀 앞에서 찍은 참가자 전원의 기념사진〉

원칙으로서 연방헌법에 천명함으로써 예산관련 기본법인 연방예산법에서 구체적 성과주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략목표에서 천명되고 프로그램 목표에서 구체화된 부처 성평등 목표들(중장기)은 당해연도 관리과제의 기획 및 성과계약(성과계획서에 해당) 수립→목표관리→산출평가→결과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지예산과정이 특정 성평등관련 재정사업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단지 해당 사업이 얼마나 성평등 관련 목표를 효과적으로 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관리

목적으로 운용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연방 행정서비스·스포츠부의 발표에서는 제일 먼저 연방성과관리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연방성과관리국은 2017년 초반까지만 해도 연방 총리실(Federal Chancellery) 산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공공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관장하는 연방부처인 연방 행정서비스·스포츠부의 공공서비스·행정혁신국(DG of Civil Service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소속으로 바뀌었다. 연방성과관리국은 각 라인부처들의 성과중심의 예산운용과 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관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전반적 질관리, 일선 라인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성평등 고려한 성과관리 위해 보건여성부의 성평등국과 긴밀한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관리제도 측면에서 재무부는 예산과 재원의 배분 및 통제, 일선 라인부처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사업 기획 및 수행, 연방성과관리국은 성과목표·지표 등의 적정성 관리 및 성과관리 전략 추진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지향적 성과관리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조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어 성평등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도록 되어 있다.

실제 예산과정에서 연방성과관리국의 개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각 일선 부처의 예산서 초안(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당해연도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산출 정의 및 단위사업 설정,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제출→성과관리국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권고안 제시→권고에 따라 일선 부처는 예산서 초안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설명 의무화(comply or explain)(향후 연방성과관리국에 의한 권고안을 일반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중)→최종 예산서 제출.

한편 사업수행 이후 성과보고 단계에서의 연방성과관리국의 개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일선 라인부처의 재정사업평가(산출평가, 결과평가) 및 보고→연방성과관리국의 성과품질점검, 표준화, 부처 간 조정, 최종 보고(디지털 시스템화를 통한 전용 웹사이트 운영)→의회와 시민단체의 심의 및 정치적 책임성 추구. 이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에 대한 동일한 관리과정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과중심의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완전히 통합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핵심적인 도전과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다양한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성평등 추진 전략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 간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얼마나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며,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에서 이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연방성과관리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만큼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